

한 · 일 관계를 통해 보는 광복 70년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광복 70년이 되었다. 70년 전 8월15일 햇빛을 되찾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만에 국가를 건설했지만, 반쪽짜리 국가, 그리고 둘로 나뉜 국가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김구는 반쪽 국가의 수립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후 광복 10주년부터 60주년까지 6차례에 걸친 10년 주기의 기념식이 있었지만, 그 기념식은 진정한 기념식이 아니었다. 70년 전 한국 민족이 원했던 국가가 아직도 이 땅 위에는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0주년이 되는 올해의 기념식도 지난 6번에 걸친 기념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945년 8월15일 희망했던 일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지역은 비단 한반도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본래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던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만주국의 만주족, 오키나와 사람들, 그리고 타이완 사람들에게 1945년 8월은 한편으로는 일본 점령으로부터 벗어난 날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서 국가를 뺏은 날이기도 했다. 만주에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그리고 타이완에는 국민당 군대가 진주했다. 진주한 군대는 그 지역 사람들을 패전국의 국민과 동일하게 대했다. 이들은 전범이 되었고, 무법천지 속에서 점령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난무했다. 타이완의 2·28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1971년까지 국가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야 했고, 이후 일본으로 편입되었다. 만주족들은 자신들이 세운 청 왕조를 다시 세우지 못했고, 중국 혁명 이후 중국에 편입되었다. 모두 이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다.

이보다도 더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던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였다. 1945년 8월15일 일본 점령으로부터 벗어난 순간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뒤 인도네시아는 5년, 인도차이나는 30년 간 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30년 전쟁은 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재앙을 안겼다.

군국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이 척결된 이날, 그들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 모두에

게 왜 행복이 주어지지 않은 것일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논리가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부의 주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단지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1945년 이후 탈식민지 과정이 지연 또는 왜곡되었다면, 일본의 경우 제3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1885년의 텐진 조약과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약들은 한국이 전근대적 중국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강대국 질서에 편입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일본 입장에서도 자유주의적 길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지면서 제국으로 나아가는 일방적인 길만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에게 거대한 재앙을 입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면서 동시에 패전국으로서 일본 열도는 심각한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 물론 가장 큰 인적 피해를 본 것은 일본 열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키나와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일본이 패망한 시점이 한국과 일본이 불행했던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은 무한팽창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을 반성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은 19세기 말 동북아시아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경험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 제3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이는 마치 1945년 직후 오스트리아가 나아갔던 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첫 번째 기회는 1943년 카이로 선언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노예상태에 있는’ 한국의 독립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이 미래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패전국인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었을 뿐이었다. 전략적이지 않은 지역에만 실시하도록 했던 신탁통치 실시도 계획되었다. 또한 강대국들의 논리는 일본의 점령 하에 있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유럽과는 달랐던 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전례를 따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모든 공약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또 한

번의 독립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하에서 일본을 상대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의 공헌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1945년 8월17일 미국 정부에서 승인하고, 소련의 스탈린이 수용한 일반명령 1호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항복을 받아야 할 주체를 규정한 일반명령 1호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던 어떤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에게도 항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미군과 소련군, 그리고 중국군과 동남아시아 연합군사령부가 그 주체였다.

게다가 4년 후 중국대륙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중국 정부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동남아시아 연합군사령부가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명령 1호는 미국과 소련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동남아시아의 구식민지 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지만, 한국은 배상은커녕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 동남아시아는 식민지가 아니라 전쟁 중 점령 지역이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고려되었고, 현재 징용에 대한 보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식민지에 대한 배상은 모든 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반대하는 것이었다. 만약 일본이 배상한다면, 다른 구 제국주의 국가들도 자신들의 구 식민지에 배상을 해야만 했다. 일반명령 1호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의 대일투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는 더더욱 얻을 수 없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국과 만주라는 경제적 배후지를 상실한 일본에게 동남아시아는 사회경제적 재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배후지였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원은 카이로선언에서부터 일반명령 제1호로 이어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들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후 계속된 정전체제로 인해, 일본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전쟁의 전쟁특수로 인한 경제성장을 통해 1945년 이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은 분단 이후 냉전의 각축장이 되어 탈식민화의 과정이 연기되었고, 1955년 자민당 중심의 체제가 성립되면서 제3의 길이 봉쇄되었다. 이 시점에서 일본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역시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불행의 한 요소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냉전으로 인해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작업이 지연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전쟁범죄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쟁범죄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국에서 그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가 주도세력으로 다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난 1957년의 시점에서 기시 노부스케가 다시 수상이 된 것은 유명한 일화이며, 한국에서도 불의의 전쟁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반미’에서 ‘반공’으로 노선을 전환해 다시 중심무대에 복귀하였다. 이들은 일본제국의 확장을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민족의 보호, 그리고 근대화와 산업화의 논리로 합리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극우적 사고를 부활시켰다. 극우세력의 존재는 파시스트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된 독일, 오스트리아와는 다른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극좌세력과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사회 내부의 이념적 분열이 계속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다가 전쟁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사장했다.

두 번째 기회는 1965년의 한일협정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1945년 이전의 불행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이는 양국이 첫 번째 기회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 속에서 미래의 길을 스스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도, 일본도 모두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만,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일본도 북일관계와 중일관계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회 역시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것은 한일협정의 동력 자체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주도세력들 역시 강대국의 이해관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 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했는데, 이것은 케네디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원조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보수화,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일협정에 소극적이었으며, 1945년 이전의 불행했던 과거의 문제를 청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일협정의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계기로 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심화해나가는데 관심이 없어 보였다.

결국 한일협정에서는 양국 정부는 1945년 이전에 있었던 한일 간의 조약에 대해 일치된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주지하듯이 한국 정부는 을사늑약(1905)과 강

제병합(1910)이 모두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봤던 반면, 일본은 두 조약이 모두 합법적인 조약이었지만, 1945년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상호 간에 서로 다른 인식이 ‘청구권 자금’ 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냈고, 개인에 대한 배상이 청구권 자금 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청구권 자금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반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권 자금에 대한 규정은 1945년 이전의 두 조약이 그 자체로서 무효일 경우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현재까지도 역사 인식에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식민지 정책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위에서 체결된 한일협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모든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전쟁 중 점령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강제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보상을 하면서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의 태도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경향신문 2015년 7월27일자 참조)

실상 한일협정이라는 두 번째 기회에서는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 주었어야 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선에 있었던 일본의 사적 재산에 대한 보상은 1945년 12월에 선포된 미군정 법령 33호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고, 독도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정된 최종본에서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양국 간의 문제만으로 치환했다.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약점과 문제를 노출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더 유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국제법적으로 모든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국제법을 만드는 주체의 하나로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07년 헤이그 국제회의)

그렇다면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성되는 현재 동아시아 체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강대국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된 상태에서 탈식민의 과정이 지연되었고, 커밍스의 주장처럼 1945년 이전의 구조가 1945년 이후 다시 부활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현재와 같이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외세에 의존해왔던 세력들이 사회주의세력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강대국의 논리와 질서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미일동맹의 재강화와 GPR(Ground Posture Review)은 이러한 전략적 목적과 함께 미국 정부의 악화된 재정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말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 양대 세력 사이에서 스스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한국 혼자서만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단순한 편승(bandwagon)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한반도 내부에서 남북관계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의 힘으로 작동할 경우 ‘편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19세기 이전 2,000여 년 간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을 때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고, 몽골과 일본, 만주족의 침입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등한시할 때 한반도는 조공외교로 생존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일본은 한반도와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1945년으로부터 70년, 그리고 1965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두 사회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70년간은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과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힘은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점차 더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만 독자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할 따름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세력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보수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다. 이들은 또한 오랫동안 지역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아 왔다.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자민당 체제를 변화시킨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낙마한 것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옮기려는 시도 때문이었다. 그만큼 두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힘은 공고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지식인 사회

밖에 없다. 우선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세계정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 시모노세키 조약과 민족자결주의, 카이로 선언과 일반명령 1호,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나타났던 사회적 분열이 식민지화와 분단국가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120년 전, 그리고 70년 전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세계정세 인식 하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꾸어 가야 한다. 주도권과 대결, 그리고 갈등을 앞세운 강대국의 논리에 맞서 홀로서기에 기초한 협조와 공생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의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도 과거사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있었다. 과거사는 하나의 수단과 명분에 불과하다. 역사 인식 문제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도 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 194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1965년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과거사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고자 하는 현상 유지 세력들의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그러한 논리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한일관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과거사 문제가 강대국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양국의 주류 세력들에 의해 단기간에 졸속적으로 처리된다면,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1965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주도 하에서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는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공 외교가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공공 외교는 무너지고, 시민사회는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공공외교는 제2트랙의 think tank, 제3트랙의 시민사회, 그리고 제4트랙의 야당을 포함한 정당 간의 교류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둘째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지속적,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시민 사회의 주장은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한국에서의 경험은 특수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 보편적 역사 속에 위치하고 있다.

양국의 시민 사회는 지난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3의 길을 되살려야 한다. 시민

사회는 정부로부터 떨어짐으로서 상대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양국 시민사회의 주장은 또한 세계 시민사회의 보편적 정서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카이로 선언에서부터 일반명령 제1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한일 협정으로 이어진 강대국 주도 하의 논리를 벗어나 평화에 기초한 미래 번영의 양국 관계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다른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려면, 또 다른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근대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야만의 20세기를 끝내기 위해서도.